

전남 김가공공장 줄도산

제조업으로 분류, 면세유 중단...122곳 휴업

물김 구매 줄어 양식어민 연쇄피해 우려

물김을 구매해 가공하는 김 가공공장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전남지역 김 가공공장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줄도산 위기로 우려되고 있다. 또 물김 구매 저하에 따른 양식 어민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김 생산량의 81.8%를 생산하는 전남지역의 김 가공공장은 모두 634개. 전국 김 가공공장 650개소의 96%로 거의 대부분이 전남에 몰려 있다.

올들어 김 가공공장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9월 현재까지 공장 문을 닫은 휴폐업 가공공장은 모두 122개소. 전체 김 가공공장의 5분의 1이 문을 닫은 셈이다.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게되면서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가공장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물김 양식 어민이 김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수산업'으로 분류해 면세

유 공급을 계속하고 있지만, 물김을 사들이는 건조하는 독립적인 가공공장은 제조업에 해당된다며 면세유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634개 김 가공공장의 62%인 393개소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이 중단됐다.

특히 김 가공공장의 경영난은 물김 양식 어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가공공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양식 어민의 물김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약 1천 900억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피해액의 대부분은 전남지역 김 양식 어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김 생산량(7천185만속) 가운데 전남지역 생산량은 81.8%(5천880만속)를 차지하고 있다.

완도에서 김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김모(62)씨는 "쌀 가공공장은 농업으로 분류, 면세유 지원을 하고 같은 성격인 김 가공공장은 어민이 직접 경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해 면세유 지원을 중단한 것이 말이 안된다. 쌀 가공공장을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전국 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 김 생산 농가의 엄청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김 가공공장을 수산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면세유 혜택을 다시 부여, 김 생산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김 양식어민들도 "김 가공공장의 경영난으로 물김 구매량 저하에 따른 어민들의 연쇄피해가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 가공공장에 대한 면세유 공급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재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부분 수산업관련 종사자들이 운영하는 물김 구매 가공공장과 양식어민을 돕기 위해 전면적인 면세유 공급 전환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5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 대사들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박길연 대사(왼쪽 위)가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北 경제·외교 강력 봉쇄

군사조치는 배제...北 "제재안 전적으로 거부"

유엔 안보리는 14일 북한의 핵 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했다. <관련기사 3·4·11면>

결의안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

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존 볼턴 유엔대사는 안보리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북한과 확산예상자들에게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할 경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왕광야 대사는 중국은 아직도 선택적 제재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에 '도발적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포괄적인 무기 금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치품의 경우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결의는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 통과 후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안보리 연설을 통해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북한은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후방학원 장학 56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www.nsbu.ac.kr
세인트 캠퍼스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www.churim.ac.kr

대한민국 국가정보
가인명인
이인명인
국내 최고 권위의
물가전문지

인권운동 대부 홍남순 변호사 타계

내일 5·18묘지 안장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광주지역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재야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홍남순 변호사가 지난 14일 새벽 2시 10분께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관련기사 8면>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마당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15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들과 재야인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고인의 영결식은 17일 오전 10시 '광주 민주 시민장(葬)'

으로 치러지며, 국립 5·18묘지에 안장된다. 시민장이 치러지기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으로는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기훈씨를 포함, 기원·원숙·광숙·기섭·성욱·영욱 등 5남 2녀가 있다. /최권일기자 cki@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

한국인 최초...내년 1월1일 취임

반기문 외교통상장관(62)이 13일 오후(한국시간 14일 새벽)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 시대가 개막됐으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신인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반 장관은 이날 총회 192개 회원국으로부터 표결없이 갈채속에 만장일치로 제8대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반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임기를 시작하며 연간 예산 50억 달러와 9만2천여명의 평화유지군 등 유엔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반 장관은 이날 라세드 알 할리파 총회의장의 제의로 192개 회원국들의 갈채속에 차기 사무총장으로선 임했으며 수락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

대 유엔의 역할에 걸맞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 장관은 "유엔의 역할이 사상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자신은 유엔헌장에서 주어진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유엔의 3대 책무인 평화와 발전,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유엔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총회에 추천돼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반 장관은 곧바로 인수인계팀을 구성해 사무총장 취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임기는 내년 1월1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감 후보 4인 프로필·공약 ▶6면

조선대 원정대 시사판마 등정 성공 ▶8면

24%
진주름과 칙칙함을 동시에
매직이펙터

IOPE